

조세재정 Brief

K I P F I S S U E P A P E R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효과성 연구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heo@kipf.re.kr

- 01** 들어가는 글
- 0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효과성
- 03** OECD 녹색예산 현황과
효과성
- 04**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2024. 12. 19.

No.174



요약

-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임
 - 2023년, 2024년, 2025년의 3개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발행함
- 본고는 ‘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OECD 국가의 녹색예산 사례를 검토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은 제도의 도입 목표인 1) 재정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특정 주제의 주류화(mainstreaming), 2) 사업의 기후변화 영향 정보가 예산편성 및 재정 관련 의사결정 반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위의 두 가지 기준으로 검토한다면 효과성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OECD와 EU의 녹색예산 설문조사 결과는 녹색예산제도의 활용과 효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기여도 정보가 실제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 필요
 - 성과예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연계가 필요함. 다양한 사업의 온실가스감축 성과를 일관성 있게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기후환경 영향’을 예산과정 전반에 주류화(mainstreaming)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허경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효과성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수정하여 작성함

01

들어가는 글

-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1. 9.)」에 근거하여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임
- 인지 예산제도(Priority Budgeting)는 특정 ‘주제’의

관점에서 정부 예산이 해당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예산제도의 한 종류임¹⁾

- 국가 재정활동에서 특정 주제를 주류화(mainstreaming)

1) Bova(2021)

- 하는 과정이며 정부가 추구하는 특정 주제에 자원을 더 많이 분배하도록 함
- 예산을 활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정부 전체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전략적 예산 계획(strategic budget initiatives)에 해당함(Nicol & Igor, 2024)
- 양성평등을 주제로 하는 성인지 예산, 기후와 환경개선을 주제로 하는 녹색예산을 비롯하여 복지인지 예산, 빈곤인지 예산, 청소년·아동인지 예산 등이 현재 많은 국가에서 운용 중임
 - OECD 38개 국가 중 30개 국가에서 운용²⁾
- 녹색예산은 기후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사업을 식별하고 각 예산사업의 환경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예산의 환경친화적 편성을 고취하고자 함 (Bova, 2021)

-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국가의 예산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임
- 녹색예산은 2022년 기준 OECD 24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음(OECD, 2024). 그러나 그 활용과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까지 충분하지 않음
- 본고는 우리나라의 녹색예산에 해당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OECD와 EU의 녹색예산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활용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0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효과성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의 역할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한 인지예산 제도임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1. 9.) (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21. 6.)에 근거하여 2023년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부터 본격 도입³⁾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제도의 총괄을 담당하며 협조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기준을 마련

- 사업을 담당하는 각 부처가 선정한 온실가스감축사업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기획재정부, 환경부, 환경공단에서 검토 및 수정요청을 진행하여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
-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은 교육과 실무지원, 사업별 온실가스감축 기여도 및 목표달성을 여부에 대한 분석을 담당
- 2023년, 2024년, 2025년의 3개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발행함

2) Nicol & Igor(2024)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적용대상과 방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허경선(2023a)을 참조할 것

조세재정 Brief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감축사업의 개요, 예산 규모,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을 포함
 - 결산서에는 예산의 집행실적,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를 포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선정하며 감축사업 여부의 판단은 내역사업별로 판단
 - 온실가스감축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포함되며 다른 목적을 위한 사업이더라도 부수적으로 감축효과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업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감축사업’으로 포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기금의 규모는 2023년 11.9조원, 2024년 10.9조원, 2025년 12.1조원으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86%에서 2025년 1.78%로 오히려 감소함
- 내역사업 단위에서 보다 엄격하게 산정한 ‘감축예산’의 규모는 2023년 9.9조원, 2024년 10.1조원,
- 2025년 10.3조원으로 매년 비슷한 규모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55%, 2024년 1.54%, 2025년 1.5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1) 최초로 중앙정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식별하여 관련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2) 정부예산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밝히고자 했다는 긍정적 성과를 가져옴
-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량할 수 있는 정량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정성, R&D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정성적으로 설명
- 한편 동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왔음
- 대상 범위가 “온실가스 감축” 예산과 기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예산 전체의 기후대응 영향 파악에 부족⁴⁾⁵⁾⁶⁾⁷⁾

표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규모

(단위: 조원, 개,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3~2025 증감률
소관부처	13	16	16	
대상 사업 수	288	294	311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A)	11.9	10.9	12.1	1.4%
비율(A/C)	(1.86)	(1.66)	(1.78)	
감축예산(B)	9.9	10.1	10.3	3.8%
비율(B/C)	(1.55)	(1.54)	(1.52)	
정부예산안(C)	639.0	656.9	677.4	6.0%

주: 괄호안 숫자는 전체 정부예산안 대비 비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2025년 연도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에너지데일리』, 「[국감]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온실가스배출사업 제외」, 2022. 10. 4.,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244>, 검색일자: 2024. 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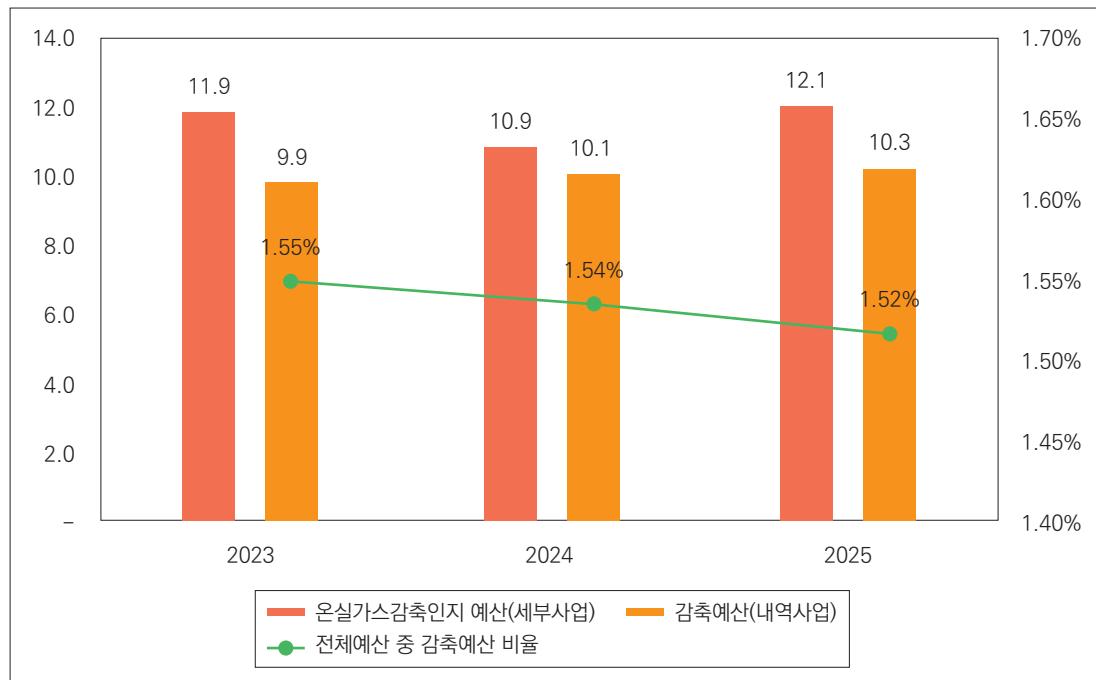
5) 이성현, 「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 분석보고서」, 『나라살림브리핑』, 제403호, 2024. 9. 11.

6)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2024.

7) 허경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재정포럼』, 통권 제330호, 2023. 12, pp. 6~36.

그림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규모와 전체 예산 대비 비율

(단위: 조원)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2025년 연도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가 낮음⁸⁾
- 내역산업 단위로 산정한 '감축예산'과 세부사업 단위 중심으로 산정한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산정에 있어 과다 산정 혹은 지침 미적용 등의 논란 발생⁹⁾¹⁰⁾
- 온실가스감축과 전혀 무관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음
-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은 제도의 도입 목적인 1) 우리나라 재정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주류화(mainstreaming), 2)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

는 영향이 예산편성 및 재정 관련 의사결정에 반영 여부로 평가할 수 있음

-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의 역할과 활용에 대해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과 이 분석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것”이라고 명시함
-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특정 주제를 주류화(mainstreaming) 한다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재 운영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대상의 범위와 사업선정 기준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 중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사업만을 식별하고 있음.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

8) 『임팩트온』, 「아직 제대로 ‘인지’되지 못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하여」, 2023. 8. 17.,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7054>, 검색일자: 2024. 8. 7.

9) 『경향신문』, 「기재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2조원 ‘뻥튀기’」, 2022. 10. 4.,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0041826001#c2b>, 검색일자: 2024. 9. 5.

10)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2024

적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전체 재정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음

- 기후변화 적응, 공정한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들이 포함되지 않음
- 대상 범위가 예산과 기금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조세 지출은 미포함

-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련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분석이 예산배정 및 우선 순위 설정에 활용 되는 시스템이 부재함
 - 재정사업의 온실가스감축 기여도에 대한 성과와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가 부족함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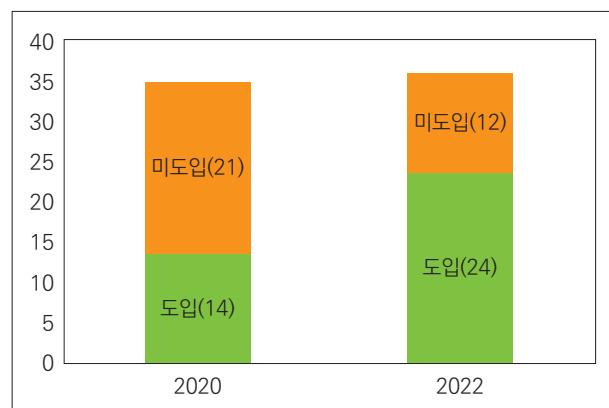
OECD 녹색예산 현황과 효과성

- OECD 국가 중 녹색예산을 도입한 국가는 2020년 35개 응답국가 중 14개 국가(40%)였으나 2022년에는 36개 국가 중 24개 국가(67%)¹¹⁾로 빠르게 확산¹²⁾¹³⁾

- OECD는 2017년 “녹색예산을 위한 파리 협력(Paris Collaboration on Green Budgeting)”을 시작하여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녹색예산제도의 구성요소와 방법론을 정립하고, 인벤토리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키려 노력하고 있음
- OECD는 녹색예산(Green Budgeting)을 “기후와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정책결정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특히 예산 및 재정 프레임워크, 관련 정책 및 실행 등 예산 관련 전 과정에 기후 및 환경을 고려하는 것을 뜻함¹⁴⁾
- EU 그린딜은 녹색예산의 도입을 의무화(2019)하여 EU 국가의 녹색예산제도 도입이 확산됨. EU는 녹색

그림 2 OECD의 녹색예산 도입 추이

(단위: 국가 수)



자료: OECD,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1; OECD,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4*, 202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1) 2022년 기준 녹색예산을 도입한 OECD 국가는 튀르키예, 스웨덴,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멕시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한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아일랜드, 그리스, 영국,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덴마크, 콜롬비아, 칠레,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리아의 24개 국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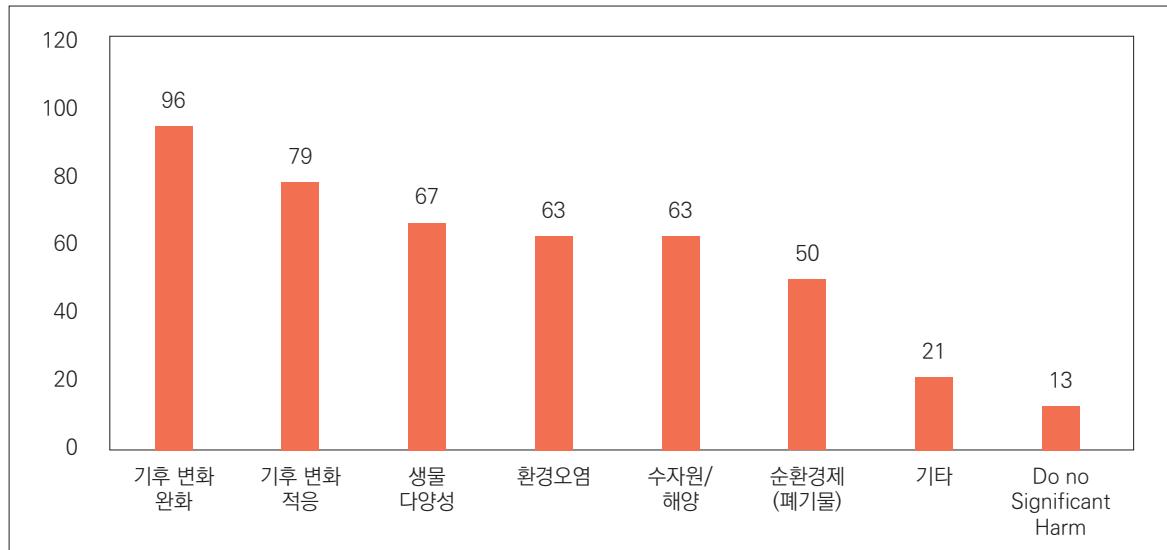
12) OECD 국가의 녹색예산 도입 현황에 대하여 2020년과 2022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각각 OECD(2021)와 OECD(2024)에 공개함

13) 2021년 이후 스위스, 칠레, 스페인, 핀란드, 그리스, 이스라엘, 한국,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튀르키예가 녹색예산을 도입함. 포르투갈은 녹색예산 도입을 중단함

14) OECD,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4*, OECD Publishing, Paris, 2024, <https://doi.org/10.1787/9aea61f0-en>, 검색일자: 2024. 5. 4.

그림 3 OECD 녹색예산 도입 국가의 녹색목표 범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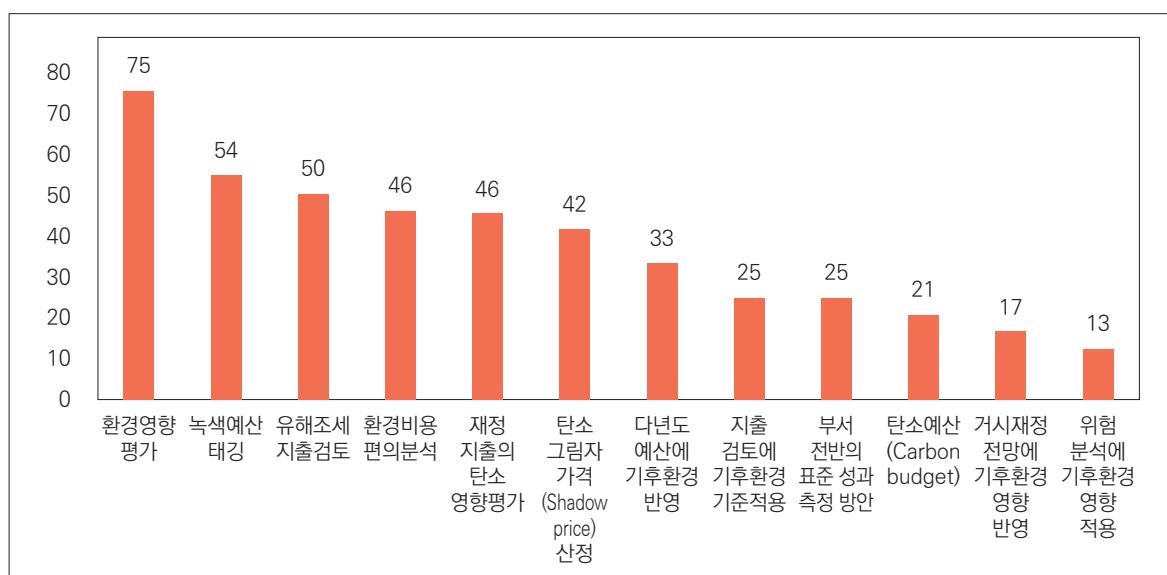


주: DNSH(Do No Significant Harm) 원칙은 해당 예산이 하나의 환경목표에 기여하더라도 다른 환경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임

자료: OECD,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4*, 202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OECD 국가의 녹색예산 정책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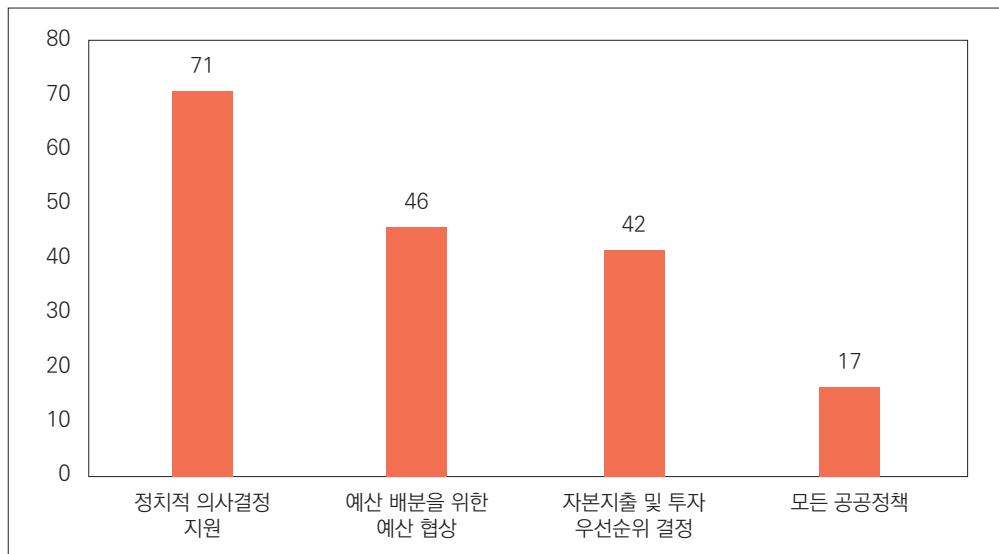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4*, 202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 녹색예산의 활용 목적

(단위: %)



자료: OECD,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4*, p.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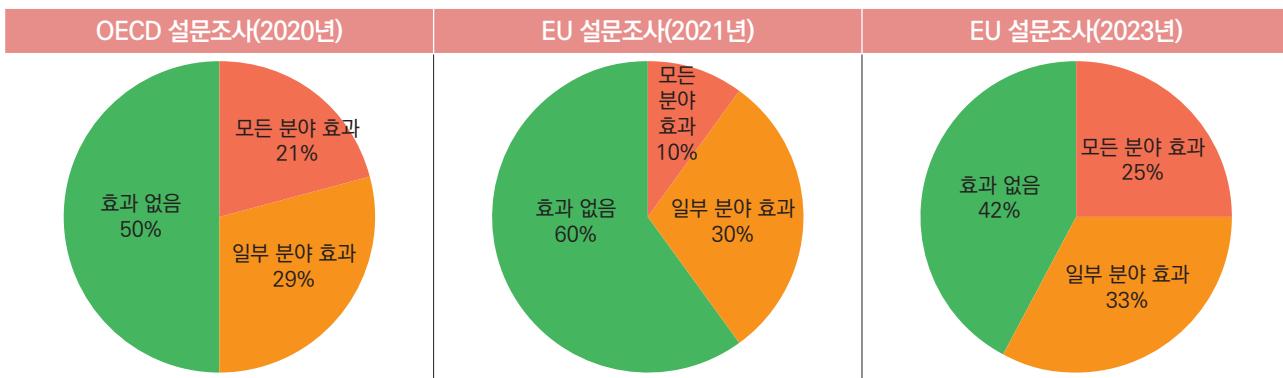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녹색예산태깅 및 사전 영향 평가와 사후평가”로 제시함(Pojar, 2024)

- 2022년 녹색예산을 도입했다고 응답한 24개 국가 대부분은 기후변화 완화(23개 국가, 96%)와 기후변화 적응(19개 국가, 79%)을 주된 목표로 활용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녹색예산 활용의 주요 목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생물다양성(16개 국가, 67%), 환경오염 개선(15개 국가, 63%), 수자원/해양 개선(15개 국가, 63%), 순환경제(폐기물) 활성화(12개 국가, 50%) 등이 목표로 도입됨
 - 대부분의 국가가 2개 이상의 목표를 활용하고 있음

- 녹색예산제도는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녹색예산을 도입한 24개 OECD국가 중 75%(18개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하였으며 54%(13개 국가)는 녹색예산태깅, 50%(12개 국가)는 유해조세지출검토를 활용함
 - 녹색예산태깅은 2020년 설문조사 당시 도입국가가 7개에서 2022년 13개 국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유해조세지출 검토는 4개에서 12개 국가로 세 배 증가함

- OECD 설문조사 결과 녹색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절차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정보 제공(17개국, 71%)이라고 답한 국가가 가장 많았으며, 예산 협상과정에서 예산 할당에 대한 가이드 제공(11개국, 46%), 자본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가이드 제공(10개국, 42%)으로 나타남
- 녹색예산제도의 효과성은 녹색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을 기후·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임
 - 녹색예산제도의 수단을 더욱 많이 활용함으로써 공공 투자, 재정지출 및 조세에 기후·환경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유해한 보조금은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Pojar, 2024)
- OECD 녹색예산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21년에는 50% 이하(OECD 50%, EU 40%)였으나 2023년에는 점차 증가(EU 58%)하고 있음을 보여줌
 - OECD는 녹색예산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실제 정책 개발과 자원배분 과정에 기후·환경기준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지”를 조사함

그림 6 녹색예산제도의 효과성 설문 응답



자료: OECD(2021), European Commission(2022), European Commission(202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2 OECD 국가의 녹색예산 활용과 효과 사례

국가	녹색예산 정책수단	활용 방법
덴마크	기후·환경 영향평가	1)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책과 사업의 기후 영향(CO2배출량)을 측정하여 평가 2) 정부 전체 기후정책의 탄소저감효과를 매년 측정
핀란드	녹색지출검토 (Green spending reviews)	녹색예산 정보를 종합하여 예산안 준비 마지막 단계에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와 국민의 인지도를 높였으며 이는 향후 예산 의사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함 예) 환경유해보조금 정보 제공
그리스	성과예산, 지출검토	성과예산제도와 지출검토(Spending Review)에 기후/환경 목표를 포함
스웨덴	예산의 기후· 환경영향 평가	예산안 제안서를 준비할 때 기후 및 환경 영향을 평가하여 결과를 정책 제안과 자원 할당에 대한 결정에 사용
영국	지출 검토 (Spending Review)	정부는 2020년, 2021년 지출 검토(Spending Review)에서 일선부처에 지출 제안사업의 기후 영향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이 정보를 예산 할당에 활용

자료: OECD,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4*, OECD Publishing, Paris, 2024, <https://doi.org/10.1787/9aea61f0-en>, 검색일자: 2024. 5. 4.의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지금까지는 녹색예산제도는 실질적인 예산 관련 의사 결정에 직접 활용되기보다는 정부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이 더 커다고 볼 수 있음(Pojar, 2023)
 - 제도 운용이 성숙해짐에 따라 녹색예산제도를 의사결정 수단으로 보다 강력하게 활용하고자 함
- 스웨덴과 영국의 사례는 녹색예산제도의 정보가 실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과 자원배분 과정에 활용되고 있음을 제시함¹⁵⁾

- 녹색예산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녹색예산제도를 운용 중인 국가들이 겪고 있는 1) 녹색예산제도 운용 역량의 한계, 2) 예산 절차 및 의사결정의 촉박함, 3) 제한된 정보와 과학 지식의 한계, 4) 정치적 의지와 지원 부족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Pojar, 2023)

15) OECD,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4*, OECD Publishing, Paris, 2024, <https://doi.org/10.1787/9aea61f0-en>, 검색일자: 2024. 5. 4.

04

나가는 글

(제언1) 재정사업의 온실가스감축 성과를 예산편성에 환류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기여도 정 보가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 필요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온실가스감축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 우선순위 배정과 예산 확 대가 연계된다면 온실가스감축사업의 신규 도입과 기 존 사업의 확대,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가능해질 것임
 - 정부예산안 편성 시 반영, 국회의 예·결산 심의 과정 활용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활용방안을 적극 적으로 마련해야 함

(제언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의 성과평가 방안 마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예산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의 온실가스감축 성과를 일관성 있게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311개의 사업 의 온실가스감축 기여도를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정성적 설명, 이행지표 등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기여도는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기 어려움

-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각 사업의 중요도와 성과를 일관성있게 측정하고 종합하여 각 사업의 기여도를 비교할 수 있는 성과평가가 필요함
- 사업의 중요도는 국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국가결정기여(NDC)의 분야별 시급성을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제언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의 범위와 기준 확대

- '기후환경 영향'을 예산 전 과정의 주요 의사결정기준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의 대상을 조세지출을 포함한 우리나라 재정 전 범위로 확대하고 재정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긍정, 부정적 영향을 모두 파악할 필요
 - 전체 예산사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 적응, 공정한 전환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
 - 대상 범위에 예산, 기금 외에 조세지출을 포함하는 것 이 필요
 - 단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중기재정운용계획에도 기후 변화 관련 예산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2024.
 -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4.
 - _____,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3.
 - _____,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2.
 - 이성현, 「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 분석보고서」, 『나라살림브리핑』, 제403호, 2024. 9. 11.
 - 허경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효과성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a.
 - _____,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재정포럼』, 통권 제330호, 2023. 12, pp. 6~36
 - Bova, E., "Green Budgeting Practices in the EU: A First Review," European Economy Discussion Papers, European Commission, 2021.
 - European Commission, Green Budgeting Database European Commission 2023 survey, 2023,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green-budgeting-eu_en, 검색일자: 2023. 6. 14.
 - _____, Green Budgeting Database European Commission 2021 survey, 2022,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green-budgeting-eu_en, 검색일자: 2023. 6. 14.
 - Nicol, Scherie and Igor Dosen, "The Emergence of Strategic Budget Initiativ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23(3). 2024, pp. 1~16.
 - OECD,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4*, OECD Publishing, Paris, 2024, <https://doi.org/10.1787/9aea61f0-en>, 검색일자: 2024. 5. 4.
 - _____,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2021, <https://doi.org/10.1787/acf5d047-en>, 검색일자: 2024. 5. 4.
 - _____,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https://www.slideshare.net/OECD-GOV/greenbudgetinginoecdcountriesin2022pdf>, 2021.
 - Pojar, Simona, "How Green Budgeting is Embedded in National Budget Processes," European Economy – Discussion Papers 196, Directorate General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DG ECFIN), European Commission. 2023.
- 〈언론매체〉
- 『경향신문』, 「기재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2조 원 ‘뻥튀기’」, 2022. 10. 4.,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0041826001#c2b>, 검색일자: 2024. 9. 5.
 - 『에너지데일리』, 「[국감]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온실가스배출사업 제외」, 2022. 10. 4.,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244>, 검색일자: 2024. 9. 5.
 - 『임팩트온』, 「아직 제대로 ‘인지’ 되지 못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하여」, 2023. 8. 17.,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7054>, 검색일자: 2024. 8. 7.

